

김정은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

조 한 범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23

신속한 권력승계

2012년 4월 북한의 4차 당대표자 회의 및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 회의를 기점으로 김정은체제의 권력지형 재편이 일단락되었다. 김정일 장례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에 취임한 김정은은 2012년 4월의 두 정치행사를 통해 당 제 1비서직과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직에 올랐다. 이로써 김정은은 당·정·군이라는 북한 권력 3대기구의 최고위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사망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명하고 김정은 자신은 다른 직함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과 형식상 동일한 권력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의 공식적 마무리가 김정일 사망 후 약 4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의 4년에 걸친 승계기간과 비교된다. 김정일은 20년 이상 권력승계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김일성 사망 당시 이미 사실상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직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김일성사망 이후 3년이 넘는 유혼통치기간을 설정하였으며, 공식적인 지도자 직함승계에 시간차를 두었다. 김정일이 당 총비서에 취임한 것은 1997년 10월이었고, 국방위원장에 오른 것은 1998년 9월이었다.

김정일의 경우 장기간의 권력승계 준비단계를 통해 자력으로 인맥과 지지기반을 형성함으로써 김일성의 지지기반인 혁명 1세대 그룹의 지원과 더불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반면 김정은의 경우 자력으로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의 권력재편과정은 김정일의 급사로 일정을 긴급히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김정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도 사실상 ‘김정일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충성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 권력승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외형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권력기반의 실질적 구축이라는 본격적인 과정을 앞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속한 권력승계과정은 김정은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공식화 되었으나 이 과정은 김정일 시대에 작성된 후계승계 설계도와 김정은의 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정치·행정에 대한 실질적 장악력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이며, 일천한 경력에 비추어 전반적인 국무 조정력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경제시찰에 주력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및 행사참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아직 공고하지 않은 김정은의 권력기반과 관련이 있다. 김정은은 권력의 안정적 행사를 위해 무력기반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에 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해법을 찾기 힘든 경제분야의 경우 김정은의 뚜렷한 동선을 발견하기 어렵다. 권력기반이 확고했던 김정일이 경제문제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른 배경이라 할 수 있다.¹⁾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 발사시도의 경우도 김정은의 취약한 국정장악력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로켓발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미 김정일에 의해서 발사가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성탑재 로켓발사의 경우 한국의 경우처럼 실패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발사상황의 공개는 무리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자신의 진두지휘 하에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대형 행사를 공개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겠다는 다른 의도를 지녔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로켓발사 실패이후 책임자들에 대한 인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도 맥을 같이한다.

예정된 로켓발사에도 불구하고 돌출된 2.29 북미 합의는 북한 내 컨트롤 타워 부재를 의미한다. 2.29 북미합의와 로켓발사라는 상충된 두 사안은 북한내의 정책적 혼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김정일 체제의 경우에도 대남 및 대외정책에 있어 강온을 오가는 갈지자 형태의 추세가 나타났으나 김정일이라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했다는 차이를 보인다.

1) 올해 들어 4월초까지 이루어진 김정은의 35회에 달하는 공개활동 중에서 군 관련 활동이 22회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부문 시찰의 경우 1건에 그치고 있다. 2011년 김정일의 공개활동 145회 중 경제목적 시찰이 61회로 군 관련 행사 39회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과 비교된다. 김정일이 생전에 8차례나 건설현장을 시찰할 정도로 북한이 강성대국의 상징으로 여겨오던 희천발전소 준공식날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해군 제 155군부대를 방문했다. 이 부대는 1968년 미군 푸에블로호를 납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일보』, 2012년 4월 9일.

장성택계의 군·공안권력 장악

최고지도자의 교체는 필연적으로 권력엘리트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김정은이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계로 이루어진 지지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존 권력엘리트 구성의 변화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2012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두 정치행사는 김정은체제의 권력지형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핵심은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계의 인사들이 실제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김정은의 실세 후견인인 장성택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위원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그쳤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금년 4월을 계기로 장성택계의 인사들이 군과 공안권력의 수장 지위에 올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군정치라는 군 중심 통제 체제인 북한에서 군에 대한 확고한 장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권력승계과정이라는 유동적 정치상황에서 공안권력은 권력엘리트 및 대중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장성택계가 군과 공안권력의 핵심적 요직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4월 북한 권부의 변화는 김정은정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장성택에 의한 장성택을 위한 권력재편'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우선 최룡해의 급속한 부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차남이자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룡해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으며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도 올랐다. 장성택의 재기 과정과 동선을 함께 해온 최룡해는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를 거쳐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근로단체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됐고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았다. 2012년 4월 7일 인민군 차수 승진과 아울러 군부 내 최고직책으로 꼽히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직을 차지했다. 최룡해는 김정일시대 군부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이 가지지 못한 국방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다. 최근 북한 매체에 의해 두 차례 보도²⁾된 최룡해의 군건설현장 '현지요해'(현지시찰)는 그의 위상을 상징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 현지지도 관련 보도는 최고지도자 외에 최영립 내각 총리에 국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최룡해 관련 보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4차 당대표자회 직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된 김원홍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도 장성택계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홍이 장성택의 측근인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을 능가하는 공안책임자로 부상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원홍과 리명수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정치국 위원에 올랐으며, 리명수는 당 중앙군사위 위원에도 올랐다. 군과 민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가진 두 기관의 수장이 모두 장성택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 소장이 군부내 고위 실력자들을 배제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보안사령부라는 군 공안권력을 확실히 장악하는 한편, 합동수사본부장의 직책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2)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5일.

최룡해를 정점으로 김원홍과 리명수의 부상은 장성택계가 군과 공안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권력재편과정에서 장성택은 자신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측근들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는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장성택 자신의 급부상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재편과정의 막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고모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정희가 당중앙위 비서로 승격된 것도 장성택계의 권력기반 강화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원로그룹의 쇠퇴

장성택계의 부상과 달리 김정일 시대의 원로들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원로인사들에 대한 부분적 상향 인사조치가 있었으나 대부분 실권이 없는 예우차원으로 보인다. 정치국 상무위원 5인의 경우, 서열상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그리고 리영호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영남과 최영림이 각각 1925년생, 1930년생으로 매우 고령이고 실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부상한 최룡해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김원홍이 국가보위부장에 임명과 아울러 그동안 국가보위부의 실세였던 우동측 보위부 1부부장은 최근 주요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공식인 국가보위부장을 임명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우동측은 국가보위부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김정일 시대 군부 핵심인사였던 김영춘도 최근 김정각 전 총정치국 1부국장에게 인민무력부장 자리를 넘겨 줌으로써 군 실권행사에서 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군부 실세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은 최근 북한 매체가 소개하는 인물 순위에서 최룡해 다음으로 호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영춘, 리영호와 우동측은 소위 '김정일 영구차 호위 8인'에 포함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김정일 사망 직후와 현재의 권력지형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위 정치부장이었던 현철해도 당대표자회를 전후로 행정직인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장기간 인민군 고위층의 인사권을 행사한 현철해는 이번 인사로 군부내 권력지형 재편에 관여할 수 있는 실권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오극렬 역시 권력엘리트 재편과정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았으며, 당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오르는데 그쳤다.

이 같은 점들은 김정은의 강력한 후견인인 장성택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지형이 재편되고 있으며, 군부 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장성택은 기존의 원로 및 실세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나 인사조치를 피하는 한편 군과 공안기관의 최고위 핵심요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고, 이를 통해 권력기반 강화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은 김정은의 재가와 아울러 직간접적인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권력투쟁 가능성

장성택계의 급부상은 군부 내 역학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군부에 대한 장악은 민간인인 최룡해의 임명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군단장 및 사단장, 그리고 핵심 보직에 대한 확고한 지지기반 형성이라는 복합적인 장악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실질적 무력행사의 중심이 되는 군단장, 사단장 등 야전군에 대한 인사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성택계는 군부 내 자파인맥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년 초 단행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부 숙청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숙청설의 요지는 김정일 상중의 부적절한 행위로 금년 들어 처형된 군 장성만 ‘두 자릿수’에 이른다는 것이다.³⁾ 이들 중에는 군 수뇌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일선 군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부의 지지에 의존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다수의 군 장성을 반체제 및 쿠데타 시도가 아닌 명목으로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권력승계라는 유동적 상황에서 김정일 상중이라고 해도 단순한 풍기문란을 이유로 군부의 핵심 인사들을 처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의 숙청설은 북한군 내부의 세력재편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룡해의 부상과 아울러 인민무력부 내의 군 이동관련 명령권자 및 행동대장에 해당하는 일선 군단장 및 사단장급에 대한 인사개편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숙청설과 동시에 주목해야할 또 하나의 사안은 김정은이 지난 2월 김정일에 의해 숙청되었던 인사 6명의 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이다.⁴⁾ 김정일의 유훈을 강조하고 ‘영원한 총비서’로 추앙하는 분위기속에서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의외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는 당초 총살형 선고가 내려졌던 인민보안부 제 1부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세력이 그 동안 경쟁관계에서 희생되었거나 밀려난 자파 인사들을 복권하고, 핵심 부서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최근 조치는 ‘자애로움’을 과시하는 조치로 보기 보다는 권력지형의 재편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최근 김정일 집권기 장성택과 경쟁관계였던 이제강⁵⁾에 대한 비판이 북한전역에서 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조직부 제 1부부장이었던 이제강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주민감시 및 반체제 활동에 대한 과격한 탄압을 주도, 상당수 인사들을 사형 등 극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강에 대한 비판은 그에 의해서 견제당했던 장성택계의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및 세력회복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으며, 최근의 움직임도 이 같은 점에 비추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숙청설 및 사면설은 김정은체제의 권력지형 재편의 일환이며, 장성택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진행될 예정인 장성택계 주도의 김정은 권력체제 공고화 과정이

3) 『연합뉴스』, 2012년 3월 22일.

4) 『연합뉴스』, 2012년 5월 2일.

5) 이제강은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기 일주일전인 2010년 6월 2일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0년 6월 2일.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 여부이다. 김정일 체제에서 단합을 유지하던 북한 지도부는 장성택계의 부상으로 동요와 균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권력재편과정은 어디까지나 서막에 불과하다. 특히 선군정치의 핵심 군부내의 권력지형 변화와 이로 인해 권부에서 밀려나고 있는 세력의 반응 양태에 따라 향후 김정은체제의 안정성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최룡해의 군권장악은 아직 군 하부조직까지 완전한 장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군 이동을 관할하는 야전의 실무선에 대한 장악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정은이 2012년 4월 14일 70명의 장교를 장성으로 진급시킨 것도 군부 내 친위그룹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⁶⁾ 김정은은 물론 장성택과 최룡해 모두 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군에 대한 실질적 장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군의 특성상 군에 대한 확고한 장악은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인맥을 토대로 가능하며, 무력활용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야전군 지휘관에 대한 광범위한 인사개편의 단행을 필요로 한다. 군 수뇌부 및 장성급에 대한 광범위한 인사는 북한 군부 내의 동요를 수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의 경우 자신이 형성한 인맥을 통한 확고한 통제력의 확보와 아울러 강력한 권위의 행사로 지도부내 균열을 최소화하고, 분파적 행위를 방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의 권력장악력은 확고하지 못하며, 대중 및 측근들에 대한 권위도 미약하다.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 형성한 인맥이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지도도시 친밀한 스킨십을 보여주는 김정은의 최근 행보는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

향후 군 및 공안권력, 행정부 내의 광범한 인사개편과정에서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은 기존 원로 및 군 핵심인사들의 권력 2선으로의 후퇴과정을 수반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반격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격이 시도될 경우 김정은이 아닌 장성택 본인 혹은 측근에 대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열세에 놓인 기존 세력들이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보고 라인의 형성을 시도, 장성택계를 압박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권력지형 재편과정의 잡음과 갈등을 교통정리할 능력이 미약하며, 장성택계의 권력장악 역시 아직 확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력지형 재편 및 이로 인한 지배엘리트 내부의 동요 가능성으로 북한체제의 원심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정권 위기요인

지배체제의 변화는 전쟁이나 국제관계의 변화라는 외적인 요인과 쿠데타 등 지배층 내부의 균열 및 밀모로 부터의 저항이라는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동된다. 소련이라는 후견세력을 상실한 동독과

6) 『노동신문』, 2012년 4월 14일.

7) 김정은은 김정일사망 이후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도도시 스킨십 등 김정일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장성의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촬영하는 등의 모습은 김정일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4월 15일 평양에서 거행된 인민군열병식에서 김정은이 공개연설을 한 것도 예상을 뛰어 넘는 일이었다.

외부와의 전쟁에 의해서 지배세력이 몰락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외적인 요인에 의해 지배체제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중동의 재스민 혁명의 진행과정에서도 외부 세력의 개입 및 영향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부의 빈번한 쿠데타가 발생한 태국은 지배층 내부의 균열에 의해 지도부가 교체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마르코스 독재체제에 대항한 필리핀 시민혁명이나 팔레비 정권을 전복시킨 이란 이슬람혁명의 경우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포함 지구촌 차원에서 장기독재체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구조적 위기와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무력통치를 통한 장기독재를 지속해왔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특수한 형태의 정치체제라기보다는 비상계엄통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북한은 군의 무력에 의존, 강력한 사회통제와 아울러 인권탄압을 통해 존속하는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의 강한 결속력과 당원 및 핵심 지지계층의 지지는 북한 정권존속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지배계층 및 핵심 지지계층의 충성에 대해서는 특혜적 시혜라는 반대급부가 제공되어 왔으며, 일반주민들은 이를 위한 자원을 강제적으로 수탈당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정권의 경우 체제변화와 관련된 내적, 외적인 차원에서 환경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외부적 위협의 관점에서 그 동안 북한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냉전체제의 경우 중국과 소련이라는 동맹세력이 존재 했으며, 냉전체제 이후의 경우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세력이 북한에 대한 외부 위협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다양한 방식의 대북 국제제재도 중국의 대북지원에 의해서 그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김정은체제에서도 중국의 지지 및 지원은 가장 중요한 생존 요소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사실상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변수는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G2국가로의 부상은 세계질서준수라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세계질서 및 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중국의 절대적 지지를 어렵게 만든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도 및 핵실험 징후 등에 대한 중국의 과거와 다른 반응은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중국 역시 ‘위험한 북한’에 대해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장거리 로켓발사 시도에 대한 국제제재는 지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며, 3차 핵실험이 시도될 경우 제재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 한국정부의 강경한 태도도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 무력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근 북한지배체제에 대한 외부적 요인이 악화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우선 권력지형 재편으로 인해 북한 지도부내의 균열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갈등을 김정은이 조절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장성택계에 의한 권력지형 재편은 지도부내의 권력투쟁을 촉발할 개연성이 있으며, 정치적 경력이 일천하고 권위가 미약한 김정은이 실세들의 갈등을 조절하거나 억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동안 체제유지의 주요 요인이었던 핵심 지지계층에

대한 특혜도 국제제재의 지속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외부자원의 유입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지방당 간부와 군부대 배급도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핵심 지지층에 대한 차별적 특혜조치까지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⁸⁾ 이 같은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정은체제의 지지기반 및 충성세력의 약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핵심지지층에 대한 특혜의 축소와 아울러 장기적인 경제난의 지속은 사회통제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탈북자의 지속적 증가와 생계형 월경의 일반화는 북한 사회 통제시스템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국경수비대 및 간부들의 부패와 뇌물의 만연 등으로 북한의 통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제력의 약화는 밑으로 부터의 저항을 억제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안간부들의 피살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⁹⁾ 주민감시와 통제의 일선에 있는 공안 간부들에 대한 공격은 북한에서 중대정치범죄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주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점차 현재화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밑으로 부터의 저항의 현재화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과 연계된다. 최소 수십 만 명에서 최대 수백 만 명까지 추산되는 아사자는 북한경제위기 실상의 징표이며, 아사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지하경제의 확산 속에서 정경유착형 부유층의 형성과 빈부격차는 새로운 사회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화폐개혁 실패로 주민들은 북한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의 위기 및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균열의 가속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주민들에게 2012년을 희망의 해이자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빌미로 주민들의 인내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2012년 들어 북한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강성대국의 징표는 실패한 장거리 로켓발사시도에 불과하다. 장기간 지속된 경제난 및 강요된 내핍생활은 대형이벤트 및 정치적 상징의 조작이라는 북한의 전통적인 대중정치 방식의 효용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 화려하게 치장되고 있는 김정은체제의 출범과 장거리 로켓 발사시도의 이면에는 한계에 달한 주민들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위협요인 증대상황에 대한 김정은정권의 대처능력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은은 새로운 이념이나 비전의 제시 또는 경제재건을 위한 정책적 행보에 있어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이완되고 있는 북한사회를 결속시킬 만한 중심적 이념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혼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김정일 체제의 경우 북한 주민들이

8) 4월 들어 북한의 도 인민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식량공급이 완전 중단되었으며, 도당 및 도 보안부 간부들도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 대해서는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위부를 제외한 모든 지방기관들의 식량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4월초부터 일반 군부대도 비상식량공급체계인 1일 공급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2012년 5월 3일.

9) 치안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양의 경우 2012년 초 평양의 보안서 감찰과정이 피살되었으며, 2011년에도 보안서장(경찰서장급)이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양강도에서 김일성정치대학의 강좌장(준장급)이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2012년 4월 2일.

수궁할 만큼의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북한체제 최대의 위기를 경유한 김정일시대의 유훈은 북한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김정은정권에 대한 다양한 위기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는 김정일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의 도래를 의미한다. 선대에 비해 경력이 일천한 김정은의 권위와 국정능력은 매우 미약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카리스마에 있어서도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도부내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정권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악화됨과 아울러 대내적으로 지배층내의 균열 또는 밑으로 부터 저항의 현재화 등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정권차원의 변화를 유발하는 촉발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촉발요인이 발생할 경우 김정은정권은 선대와 달리 대처능력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